

# 피지컬 시로 지역 제조혁신 본격화

### 배경훈 부총리, 전북대 방문... '피지컬 AI 사전검증사업' 실증 성과 점검·지역 AX사업 추진 전략 논의

피지컬 시를 활용한 지역 제조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제조기업과 전문가들과 함께 피지컬 AI 기반 자율제조 확산과 지역 AX(인공지능 전환) 대형 R&D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과 현장 실증 시연 사업 성과 보고, 기업 간담회로 진행됐다. 특히 피지컬 AI 기술이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돼 생산성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한 성과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5년 추경예산을 통해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를 향후 지역 AX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에는 제조 분야 실증랩이 구축돼 국내 최초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북대 실증랩은 조립·검사·라벨링·유연생산 등 다양한 제조 공정을 실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실제 생산 공간과 기술 혁신 공간을 구분해 '실험과 생산'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이기종 설비 협업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전북대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해 장례를 둘러보고 있다.

다. 사전검증 사업에는 D&O토리드, 대승정밀, 동해금속 등 자동차 부품 기업이 참여했다. D&O토리드는 자율주행 이동로봇을 활용한 무인 물류·로봇 자동화를 도입해 공정 효율을 높였고, 대승정밀은 로봇 머신테닝을 통해 설비 가동률 향상과 불량률 감소 성과를 거뒀다. 동해금속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는 유연생산 체계를 구축해 수작업 중심 공정을 자동화했다.

이러한 기술 적용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과 소음 등 작업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피지컬 AI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기업 대표와 연구진이 참여해 피지컬 AI 제조혁신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증 중심의 정책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배경훈 부총리는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은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현장 실증을 통해 검증된 기술이 실제 공정에 적용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01만호 기자

# 도, 복지 사각지대 아우르는 '전북형 복지정책' 본격 가동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로 이중 복지인전망 구축 상시 취약가구부터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까지 맞춤형 보호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 밖에 머물던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전북민의 이중 복지인전망을 구축해,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다 촘촘하게 지키겠다는 취지다.

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만2,432가구, 14만1,270명으로 전체 인구의 8.1%를 차지한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북지도는 법정 기준을 소폭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제외되는 가구를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을 전국 최초로 병행 운영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 법정 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완 제도다. 도는 총 3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해 70가구의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단전·단수,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단기 지원 제도다. 도는 1억 4천만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편성해 정부 긴급복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도움이 시급한 145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전북형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85%, 금융재산 1,056만 원까지 적용해 국가형 긴급복지(기준중위소득 70%, 금융재산 856만 원)보다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 제도의 문턱 바로 위에 놓인 위기가구를 전북형 제도로 보완하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하고, 단전·단수·보험료 체납 등 21개 면적 47종의 위기 정보를 연계한 전북형 선제 발굴 체계를 가동한다. 발굴된 가구에는 긴급생계비, 난방

비, 주거 지원 등을 즉시 연계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1,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일제히 상향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2만8,316원으로 높아져,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전북자치도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은 "2026년 기초생활보장 강화는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생존을 실제로 지켜주는 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취약계층 누구도 위기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특별 이벤트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준 16.5%~44% 세액공제 도, 설 이벤트 참여자 150명 추첨 전북 특산품 추가 증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26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시기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구간이 확대되면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16.5%에서 44%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6.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4천 원의 세액공제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기부 참여자의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

전북도는 이번 설 이벤트 기간 동안 기부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전주 이강주, 장수 오미자청, 익산 고구마 등 전북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경품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기부자의 자택으로 무료 배송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설 명절의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북도는 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무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공제의 중요성을 체감한 시기에 전북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 도내 기초의회 새해 첫 회기 개회

###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6일 2026년도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내달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과 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됐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인사검증 관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6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9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12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철원 의원),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소길영 의원), △익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 의원) 등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강경숙 의원은 대화로 부활은 논의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라고 했다. 장영호 의원은 선심성·일회성 예산에 밀린

됐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경제불황과 예기치 못한 사회적 혼란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군산은 멈추지 않았으며, 우리 군산의 바탕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새해를 맞아 군산시의회는 멈추지 않는 적토미의 열정으로 시민의 삶을 살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이정특실'의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시민의 소중한 뜻을 군산 성정의 핵심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생활 SOC의 현실을 지적했으며, 김미선 의원은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수급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진영 의원은 이동노동자쉼터 보충금 손실과 기간제근로자 1년 미만 고용 관행에 대해 발언했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면서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회 개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사자상어를 크게 보고 또한 세세하게 살핀다"라는 뜻의 '대관세할(大觀細察)'로 선정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넓은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인 익산발전 방향을 대관(大觀)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들을 세찰(細察)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 1면에 이어... 국민 82.7%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찬성"

이로써 전북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번째 공식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B/C 1.03이라는 수치는 전주 하계올림픽이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를 넘어 국가적 투자 가치가 충분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지방도시 전주에 국제적 규모의 mega 이벤트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로 평가된다.

총사업비는 6조9,088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중 시설비는 1조7,608억원(25.5%), 운영비는 5조1,478억원(74.5%)을 차지한다. 도는 경기장 신축을 배제하고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 임시시설 설치, 전담 예정 시설 활용을 통해 회의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들 통해 시설비보다 운영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경기장은 총 회기로 구성하고, 도내 32개와 타 지역 19개에 분산 배치하는 전략적 분산 개최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IOC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올림픽 지원인 '올림픽 아젠다 2020+'에 부합하며, 지방도시의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재정 효율성과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주광역에는 개·폐회식과 메달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가 가장 많은 수영, 국민 선호도가 높은 주요 인기종목인 양궁,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축구 결승 등을 집중 배치하며 전주가 올림픽의 사신상 중심 무대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육상, 테니스 조정/카누 등 일부종목은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장 확보와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 분산 배치했다. 여운 지지도 탄탄하다. 한국스포츠과

학원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약 4주간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 국민 82.7%, 전북도민 87.6%가 전주 올림픽 유치를 찬성했다. 조사는 전국 가구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1,100명과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찬성 이유로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전북 51.1%, 전국 39.2%) △국가 이미지 제고(전북 29.0%, 전국 20.2%) △국제대회를 유치할 경우 △전북 13.5%, 전국 14.5%) 등이 꼽혔다.

이는 IOC가 개최지 선정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국민 지지' 항목에서 전주 가 뚜렷한 강점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과 독일 함부르크는 국민 지지 부족으로 유치를 중도 철회한 바 있어, 이번 압도적인 찬성률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개최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1988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지방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해 수도권 중심의 대형 국제행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과도한 시설 투자를 지양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속가능하고 재정 효율적인 모델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겠다는 전략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전주 올림픽이

가져올 다양한 효과도 제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경기를 직접 즐길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 전문체육 발전, 스포츠산업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26년 2월 6일 전북도의회에 '올림픽 유치 동의안' 의결을 받고,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유치 승인 신청을 한 예정이다.

이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정부 승인 절차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올림픽을 지명도시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자, 국제사회에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제성과 환경, 국민 공감대를 누를 갖춘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심의 및 IOC 지속대화 단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유치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1만호 기자

## 군산시의회 새만금특위, 새만금 신항 갈등 조정 규탄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분열을 조정하는 지역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선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특위는 최근 김제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개최한 집회와 성명, 릴레이 집회는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쟁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지역 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만금특위는 새만금 사업의 법적 구조와 국가계획 체계를 의도적으로 의면하고 있다며 현행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방조제 안쪽의 토지'와 대동량영으로

정한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제시가 주장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 신항을 배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가항만정책과 신항건설 추진법에 따라 항만의 설치·운영 주체 및 공간적 범위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중대한 국가 정책 논의를 자국적인 구호로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만금특위는 새만금 신항은 행정구역상 군산시에 속한 두리도와 신시도 사이 해역에 건설되고 있으며 해양 관할권과 행정적 책임 또한 군산시에 있기에 어떠한 지자체도 이를 침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만호 기자